

2차 북미회담·경제·개각... 文, 설이후 대형과제 직면

北美정상회담 후 김정은 방한 유력
文 “韓 국제정치 급변... 기회 살려야”
청와대에 기업초청 등 경제행보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날인 4일 경남 양산 자택 뒷산에 올라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

민족대명절 설날이 6일을 기점으로 끝나는 가운데, 설날이 끝나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형 국정과제들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대형 국정과제들은 크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경제’, ‘개각’ 등이 꼽힌다.

우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2차 북미회담은 이달 말 개최된다. 북미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래서인지 다가올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올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2차 북미회담이 성

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지금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중

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다음은 경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해 첫 달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른바 ‘경제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굼직한 경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혁신 창업기업 현장’을 찾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인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차례대로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벤처기업인들을 다시 청와대에 초청하기 때문이다. 오는 7일에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또는 1세대 벤처기업 등을 이끄는 약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연관이 깊다. 통계청은 지난달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광복 경제행보를 걷는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 때 언급한 “나라 안팎

으로 경제가 어렵다. 선거 때 약속했던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무색해지게 된다.

마지막은 개각이다. 여권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할 때 청와대는 설 연휴 후 개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각 대상은 ‘정치인 장관’들이다. 정치인 장관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통일부도 개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장관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인 장관들과 바턴터치할 후임들은 현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는 학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관들이 이번 개각 검토 대상”이라며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비롯해 2~3명 정도가 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서열에 묶인 법관인사... ‘고등부장직’ 폐지될까

법원, 재판거래 나선 정황 드러나
대법원장, 법률개정안 국회 전달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 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원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히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부 통신문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트럼프 국정연설 보는 대합실 이용객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 이용객 등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도시 지역별 균형발전 필요”

전 연안 인구 51% 4개지역에 거주
KMI, 신해양도시 전략 마련 시급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경쟁력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도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도시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에 따르면 연안인구 중 90.7%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구

모, 재정역량, 해양산업 등에서 격차가 심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등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해양산업 사업체 분포도 2016년 기준, 1만7854개 중 부산·울산·경남에 약 54%, 인천·경기에 약 22.9%가 분포해 있어 해양산업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올 즉석밥·즉석죽 매출 14% 증가 전망

농식품부, 흰밥 47%·볶음밥 16% 등

올해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과 즉석죽 매출이 14%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즉석밥·죽 시장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밥·죽 간편식은 쌀을 주원료로 조리 가능한 식사 대응식으로, 용기 또는 파우치에 밀봉하고 고온 고압으로 멸균하여 장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공 저장 제품을 말한다. 이번 분석은 밥·죽 간편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POS(Point of sale)데이터의 매출실적 자료를 이용해 실시됐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POS 기준 밥·죽 간편식의 소매점 판매액

은 2017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시계열 모형분석을 통해 올해 밥·죽 간편식 판매액을 전망한 결과 2018년 대비 1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 판매액 비율을 살펴보면 흰밥 판매액 비중이 47%로 가장 높으며, 볶음밥(16.1%), 덮밥(8.6), 국밥(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밥·죽 간편식의 kg당 가격은 2016년 1월 5653원에서 2018년 11월 5667원으로 큰 변동이 없던 반면, 판매량은 2018년 2016년 대비 142% 증가했다.

고급화에 따른 단위당 가격상승 효과는 거의 없고, 4인 이상 가구의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패턴의 경우, 3000가구로 구성된 소비자 패널의 구매패턴을 조사한 결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즉석밥 등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가구당 밥·죽 간편식을 많이 구매하는 가구는 가구주 연령 40대, 가구원 수는 5인 이상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구매액 증가율도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가 각각 36.5%,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소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기부, 올 해외진출사업에 1929억 투입

8개 사업 추진... 온라인에 422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8개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929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예산의 20% 가량은 수출 감소기업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수출과 한류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신흥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규모,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77억원이던 온라인 수출 지원 예산이 올해는 4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수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온라인수출 초보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